

04

노아의 방주와 비둘기의 올리브나무 가지 - 공영형사립대에 관한 단상(斷想)들 -

김문주(Kim, Moon Joo)

영남대학교 교수,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정책위원 역임(국문학 박사)

kmj2111@ynu.ac.kr

1.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은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한 변곡점이었으며, 그 변화의 향방과 범위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물론 변곡점을 통과한 지금-이곳의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이를 받아 구체화해야 할 정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당도한 지점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 노력해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는 우리 사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웅변해준다.

좋은 국가 없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이었는가. 교육자로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목도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정식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보에 대한 선호와는 별도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공약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바 있다.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 2019년도 신생아 수 28만 2천명이라는 수치가 시사하는 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살 만한 국가가 아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외침은,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 국가를 바꾸라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촛불 혁명의 정신은 사람을 귀하게 받드는 사회, 위계와 특권이 아닌 수평적 자유로움을 향유하는 사회에 대한 요청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캐치 프레이즈에도 담겨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교육과 노동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설이 과연 가능한가?

교육부를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는 역설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수행하는 국가를 구성할 것인가.

2.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의 고등교육은 철저하게 교육부에 종속되었다. 각종 국고 지원사업 명목으로 국가가 대학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고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최근 한 설문에서 70% 이상의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교육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 이상 종전의 방식으로 대학지원사업

을 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가는 교육하는가. 교육 개혁 없이 대한민국은 행복할 수 없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패러다임을 발본적(拔本的)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 끔찍한 입시지옥과 소모적인 대학경쟁의 늪에서 한국사회는 벗어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 조건이고 사회적으로는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김명연)이다. 마땅히 교육의 효과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공동체로 귀속된다. 그래서 교육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이며, 공익(公益)의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는 구성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사립학교가 과다한 대한민국의 기형적 현실에서도,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하게 사유되어야 하고 관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공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사유해야 한다면, 그때의 공익(公益)은 무엇인가. 2016년도 기준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은 명목상 0.6%,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예산규모는 0.4%, 고등교육 예산 중 서울대 지원 예산 규모는 6%를 상회하며, 2016년도 사립대 국고보조금 5조 5147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1조 8365억 원이 상위 10개 대학에 돌아갔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고등교육 예산의 배분 양상은 우리 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명약하게 보여준다. 과연 이것이 우리 고등교육이 겨누어야 할 공익적 가치인가?

주지하는바 한국사회는 더 이상 계층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회이며, 학벌은 이를 공고히 해주는 핵심 기지이다. 교육이 사회적 부를 대물림하고 인간의 가치를 나누는 반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은 온갖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학벌의 우산 속에서 사회적 재화를 독점하고 있다. 기회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특정 국민들만을 향하고 있다. 특정 국민은 목적이고, 보통 국민은 수단인 셈이다. 교육과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결코 건설될 수 없다.

3.

‘공영형 사립대학’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한국의 (교육)현실과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출된 새로운 시대의 대학 상(象)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보자면, ‘공영형 사립대학’은 한국 고등교육 체제개편의 관건이라 할 만하다. 국공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립대학의 성격을 전환하여 국공립대학과 공영형사립대학을 지역네트워크로 묶음으로써 고등교육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은, 작게 보면 정부-책임형 대학의 확충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책을 둘러싼 배경과 취지를 한껏 존중하자면 서울-명문대 중심의 일극체제를 해체함으로써 대학입시를 혁신하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구상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반문했던 “이게 나라인가?”, 즉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연장선 위에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구상 속에는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어떤 응답이 내장되어 있는 셈이다. ‘공영형 사립대학’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들 속에 이 정책의 취지나 (장·단기) 목표로 거론되었던 내용들 — 지역균형발전, 대학서열구조 완화(타파), 대학입시 혁신,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여건개선, 대학지배구조 개선, 사학 비리 근절 등 — 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한국대학교육의 온갖 적폐들의 청산이 전제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논의들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대학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육성하여 이들 대학을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변화·발전시키겠다>는 야심만만한 의욕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별한, 혹은 발본적(拔本的)인 움직임은 집권 기간이 후반부로 전환된 현재에도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고등교육 체제개편은 허사(虛辭)이다.¹⁾

2018년 발표되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무엇인지 재삼 생각하게 하였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종교/예체능 계열 위주의 대학 등 평가제외 대학을 빼면, 수도권의 경우 57개 대학 중에 52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91.2%)된 데 반해 지방의 경우 평가 대상 104개 대학 중에 68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65.4%)되었고, 평가제외 대상을 포함하더라도 수도권은 73.2%인데 반해 지방은 58.6%의 대학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참작하여 2주기 평가에서는 권역별 선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 탈락 대학의 87.8%가 지방대학이라는 사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차별성을 무색케 한다.²⁾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진단대상 대학 136개 중 87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지만, 평가제외대학을 빼면 평가대상 중 65%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75%가 선정된 4년제 대학과의 차이를 보였으며, 91.2%, 혹은 73.2%나 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선정비율과 달리 전문대학은 55.8%(24/43)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수도권의 4년제/전문대학의 선정비율이 상반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2017년 9조 4,253억이었던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2018년도에 0.8% 증액된 9조 4,987,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2017~2021)을 참조하면 2021년도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1조 2천억으로 2017년 대비 19% 증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 예산이 57조 4천억(2017)에서 75조 3천억(2021)으로 31% 증가한 것에 비하면 고등교육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셈이다. 2014년도 기준 교육단계별 공교육비의 정부/민감 부담액을 살펴보면, 비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정부 부담이 OECD 평균 91%인데 반해 한국은 87%, 고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 70%인데 반해 한국은 34%이다.

2) <http://khei-khei.tistory.com/2256> (지방대 몰락 예고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대학교육연구소, 2018.6.22)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큰 틀이 대학서열구조 완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속에 설계되었다는 천명에도 불구하고 대학지원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국립대학 지원예산(40개 대학 800억)이나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예산 역시 주목할 만한 확충이나 확보가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고등교육 방향에 대한 교육단체들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가 요청된다. 이는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도 이념적 청사진을 펼쳐놓기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과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교육체제 개편은 결코 문재인정부에서 완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궤도에 올려놓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결과, 개편 이후의 먼 그림을 자꾸 제시하는 것보다 고등교육의 본질, ‘오늘날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논의하고 성찰하여 그에 필요한 단계적 실천들을 수행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문대학의 경우 93%, 4년제 대학의 경우 82%나 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청산되지 않고 반복·확산되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법인의 문제를 방치한 채 대학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공공재(公共財)이고, 사립학교의 경영권은 재산권 보장의 일환일 수 없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결코 대립이나 갈등 관계로 볼 수 없다. 한국사회 교육 적폐의 근간인 사립학교를 공공의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서 고등교육의 정상화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영형 사립대학’의 구축은 요원하다고 판단된다.

고등교육의 육성을 지역의 발전과 묶고 대학의 경쟁력을 개별대학의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공의 역량으로 사유하려는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길들여진 우리의 시각과 인식의 전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한국 사회에 ‘대학이란 무엇인가’, 아니 ‘대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혁신의 장(場)이어야 하며,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학교구성원들을 교육의 주체로서 바로세우는 교육정상화의 장이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현 교육처럼 상대를 밟아야만 살아남는 제로섬(zero-sum) 체제를 넘어서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경쟁-생존의 절벽으로 내몰린 사립대학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육지의 존재를 알려준 비둘기의 올리브나무 가지여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존-경쟁의 내면을 넘어서는 형제애와 동지적 연대일 것이다.

4.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교육 공약사항은 <거점국립대학의 집중 육성, 교육/직업 중심의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육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과 대학을 묶고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겠

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방향은 현재 우리 대학사회의 블랙홀인 무한 경쟁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지점에 놓여 있다. 무엇을 위해 우리 사회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기준과 지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의 공익에 부합하는가.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와 더불어 설계되는 것이 맞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학이 과다하고 사학의 전횡이 미만(彌滿)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고민해야 할 선택지가 아니다. 그것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교육은 공공재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학(私學)이라 하더라도 국가/사회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적 소유와 권리는 분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은 운영의 주체 차원을 넘어 운영의 결과가 공익(公益)에 기여하도록 방점을 두어 설계되는 것이 온당하다. 이 대목에서 지역 국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학은 지역 공동체와 긴밀하게 결속되는 것이 필요하다.³⁾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는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를 볼 때 앞으로 지역의 소멸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모두 서울/명문대로 향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교육청이 이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한국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서울이 아니어도 지역별로 충분히 건강한, 저마다의 다양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할 의무가 있고, 그 중심에 대학이 놓여야 한다. 공영형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분권의 문제 속에서 설계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여기에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직업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 별도의 트랙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시범적으로나마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육의 성격,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 대한 국민여론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지금-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 없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일부 대학지원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우산 아래 많은 대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국민여론과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공론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대학의 공적 성격과 사립대학의 문제들이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우리 대학의 현재와 현실들, 사학의 비리와 부실의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 2000년 전후의 일본사회는 장기불황으로 프리터족(Free Arbeiter의 일본식 조어)이 대거 출현하였지만 현재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거의 없다. 한편 현재 일본의 대부분의 대학은 지역센터를 두고 지역의 문제를 대학이 함께 고민하는 지역대학의 모델을 지향해가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관건이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라는 점, 아울러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공사추)’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을 비롯한 관련 주체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전략적/방법적 사유와 실천으로 보인다. 상술하자면, ‘공영형 사립대학(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비리(부실)대학의 진입장벽을 두지 않도록 요청하고 이들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 우선 아래 편입되도록 후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학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전시(展示)할 수 있다면 이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영형 사립대학(안)’에 전문대학의 몫을 높이거나 우선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쟁-입시 중심의 우리 교육은 이제까지 학업-우수자에 편향된 체제였으며, 이는 교육이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물림 수단으로 전략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였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 이는 전문대학(기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을 바꾸는,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5.

여러 차례의 내부 토론회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방향 전환하는 이 야심찬(?) 기획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이 안(案)과 작업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획은 또 하나의 이익 집단이 도모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둘러싼 고질적 환경을 개혁해내는 일은, 실로 한국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은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여 이 거대한 기획을 추진하는 주체들에게는 국민 여론을 설득해낼 수 있는 명분과 가치, 정책 방향의 전체적 합리성, 그리고 현실에 착근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공영형 사립대’를 둘러싼 논의에 꼭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바깥(외부자)의 시선이다.

‘공영’과 ‘공익’은 짝짜지만 유사 개념은 아니다. ‘공영(公營)’이 운영의 주체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 ‘공익(公益)’은 운영의 결과에 방점이 놓여 있다. 전자가 문제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후자는 그것의 결과가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기를 염원하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

수차례의 ‘공영형 사립대학’ 연구단의 발표문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빌어 ‘공영형 사립대학’을 둘러싼 추진배경이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고등교육과 관련한 공약사항에는 거점국립대의 (명문대) 집중 육성, 교육/직업 중심의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지원, 대학 네트워크 구

축과 성격 재조정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여기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육성’ 사업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해보면, 고등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고질(痼疾)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 고질은 한국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위계적 구도일 것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은 이 서열구조의 해소를 겨누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공약사항들의 맥락을 좀더 헤아려보면, 그 핵심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가 가로지르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일원/중심주의에 대한 (타파가 아닌!) 완화가, 그리고 지역과 대학을 하나로 묶는 상생연계가 고등교육 개혁 방향의 큰 그림인 셈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맥락과 방향 속에서 사유되어야 하며, 아울러 ‘공익’의 구체적 성격도 이러한 의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공영형 사립대학’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연구단의 기획은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의 목적’을 다중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의 논리는 궁색하다.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여건 개선(연구중심대학 육성), 대학지배구조 개선, 대학입시개선 이 모든 것을 제한된 자원의 특정 사업으로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고등교육 정책의 설계만으로 이것들 모두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과대하다. 그러한 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안은 지역 ‘거점국립대’ ‘소규모 (교육직업중심) 강소대학’ 육성 사업과 분리해서 설계할 수 없다. 대학을 ‘지역’과 묶어 상생연계를 도모하는 것, 그래서 서울/명문대 중심주의를 완화하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 운영 방안’의 세부를 횡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공영형 사립대학’ 안은 고등교육 개혁의 전체 그림 속에서 설계되고 추동될 때 좀 더 분명한 설득의 논리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여론 형성 작업은 이러한 고등교육 개혁의 전체 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거점국립대네트워크 추진 모임과 함께 하는 여론전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안(案)의 성패 중 하나는 고등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여론의 공감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이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로 구체화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개혁 전체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더 심도 있게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더, ‘공영형 사립대학’ 안을 설계할 때 사학(私學)의 부정적 성격을 제한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공익’의 성격을 대학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실천적으로 구현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이 사업이 매력적인 중심을 다수 만듬으로써 일원주의를 완화하고 해소하려는 구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학의 문제는 우리 교육의 고질(痼疾)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교정 과정 없이 성공적인 ‘공영형 사립대학’의 안착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퇴출되었던 60여 곳의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우리 교육의 절대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며, 어찌 보면 표면화되지 않은 사학이 더 심각할 수도 있을 터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고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공적 성격으로 전환하는 것일진대, 사학의 비리와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학’을 시행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잘못 처리되었던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선행/동반되어야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비로소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이 좀 더 강고한 연대와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정권을 교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교육과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계 단체들은 대승적 연대를 이루어 여론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과 관련한 논의들이 일부 사립대학의 교수들에 국한된다면, 이 정책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무한 경쟁체제로 내몰린 사립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일부가 존폐와 생존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작은 구명보트가 될 때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목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 그것은 이 정책과 관련된 교육단체들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중의 하나이다.